

2023-3호

D.gov

해외동향



Issue

아랍에미리트, 공공부문 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안내지침 발표
OECD,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정책 백서 발표

News

미국 및 중국, 인공지능 규제·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 등 총 7건



CONTENTS

01 Issue

- 아랍에미리트, 공공부문 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안내지침 발표 _ 3
- OECD,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정책 백서 발표 _ 13

02 News

- 미국 및 중국, 인공지능 규제·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 _ 30
- 미국, 신규 개편된 정부 웹사이트 공개 _ 32
- 스위스 및 미국, 기상·기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 _ 35
- 중국 지자체, 공공 부문 급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지급 _ 36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ID 출시 _ 37
- EU 집행위원회, 유럽 디지털 ID 월렛 시범 프로젝트 추진 _ 39
- 호주, myGov 서비스 사용자 경험 관련 감사 보고서 발표 _ 42

ISSUE

①

아랍에미리트, 공공부문 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안내지침 발표

Reading Point

-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지침(guideline)을 발표¹⁾
-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설명과 공공부문에서의 도전과 기회 요인, 효과적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

개요²⁾

- **(주요 내용)**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공공부문 기관·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채택하고 헬스케어, 운송에서 교육에 이르는 주요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안내지침을 발표
 - 안내지침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전과 기회 요인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근 방식 제시,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강조,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이미지 및 비디오 합성, 번역, 음악 구성 및 텍스트 생성을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적용 방안을 제시
- **(등장 배경)** 세계 주요 국가는 인공지능 성숙도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내세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채택을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1)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Cabinet Affairs Prime Minister's Office(2023.3.), AI Adoption Guideline in Government Services

2) 참고자료 : The National(2023.4.30.), UAE launches guide on adopting AI technology in key sectors Alarabiya News(2023.4.30.), UAE launches 'Generative AI' guide to facilitate adoption of AI technology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31(National Strategy for AI 2031)」³⁾을 선언하고('17), 국가 인공지능 역량 구축 및 정부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협력체계 개발 관련 이니셔티브를 시작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향후 3년간 아랍에미리트에서 IT, 통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및 로봇 공학과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출이 200억 달러에 이르고, 향후 10년 내 국내총생산(GDP) 중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9.7%에서 19.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⁴⁾

○ **(목적)**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제시한 안내지침의 주요 목적은 정부 서비스 전반에 미래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이며, 특히 아래 4가지 목표를 지님

- ①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 가치와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
- ② 국가적 관점에서 검증된 포괄적 체계/framework) 제공
- ③ 정부 서비스 환경 내 효과적인 인공지능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교훈과 주요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공지능의 영향 가속화
- ④ 실현 가능성(feasibility)과 가치에 따라 정부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주요 의의)** UAE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 장관 오마르 술탄 알올라마(Omar Sultan Al Olama)는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선구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선제적 대응 단계를 의미한다고 밝힘

-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미래 기회 포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전략 산업의 혁신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부연

3)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발전을 위한 차기 동력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GDP에서 인공지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14%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 또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Economy and Remote Work Applications Office)를 설립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2020.08.28.), UAE, AI·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 추진 The National(2023.3.28.), UAE spending on digital technology to hit \$20bn by 2026, BCG says

4) The National(2023.3.28.), UAE spending on digital technology to hit \$20bn by 2026, BCG says

안내지침의 주요 내용

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기대효과

- **(운영 효율성)**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일상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공무원이 더 전략적이고 창의적·분석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
- **(경제적 가치)** 인공지능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생산성을 촉진함으로써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역 인공지능 산업과 연구개발(R&D) 활동의 발전으로 민간 부문의 사업 기회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정부의 의사결정 능력 강화)** 인공지능은 정부 의사결정자가 국가 정책과 연관된 주요 사항⁵⁾에 대한 최선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문제 발생 상황에 더 정확하고 적응적(adaptive) 대처 방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민 의견수렴)**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기능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와 같은 영역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시기적절한 정부 서비스의 대응이 가능
- **(혁신 통로)** 정부 서비스를 더 선제적이고 시민 개개인의 특징에 맞춰서 제공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부문과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인공지능 관련 혁신 기회를 창출
- **(생태계 연결고리)**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과 다른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가 플랫폼으로 기능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을 장려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생애 서비스(life journey)를 설계·실현

5) 예시로는 디지털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가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

②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주요국의 전략

- 인공지능 기술이 지닌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

※ 캐나다 범국가 인공지능 전략, 일본 인공지능 기술 전략,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등 포함⁶⁾

- 전 세계 국가들은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접근방식을 지님
 - (① **전략적 초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고령화 문제 해결, 싱가포르는 글로벌 물류 허브 부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주력

<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방식 : 전략적 초점 >



※ 주요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주요 전략적 초점은 ▲국가 과제·위협 해결(일본, 인도) ▲국가 강점·기회로 활용(싱가포르, 독일)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자리매김(대한민국, 미국, 중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② **인공지능 산업 발전**) 인도, 핀란드 등은 정부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을 채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 한국, 중국 등은 인공지능 기술 경쟁 우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생태계에 집중

<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방식 : 인공지능 산업 발전 >



※ 주요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방향은 ▲기술 소비 촉진(인도, 핀란드) ▲소비와 생산 간의 균형(일본, 한국) ▲기술 생산 장려(미국, 중국)로 구분할 수 있음

6) 참고자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12.31.), 주요국 인공지능(AI) 전략 분석(하)

- (③ 정부의 역할) 프랑스, 영국 등은 인공지능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인재 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한국, 중국 등은 전략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려는 접근 방식을 펼치고 있음

〈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국의 접근방식 : 정부의 역할 〉



- ※ 인공지능 기술과 연관된 주요국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인재양성 등의 기술 활성화 요인(enable) 제공자(프랑스, 핀란드, 영국) ▲활성화와 직접 활용 간의 균형(미국) ▲정부가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사용자(한국, 중국)로 구분할 수 있음

③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을 실행하고 목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를 제시
 - ① 인공지능 활용 사례)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는 국가 전략과 포부, 우선과제를 토대로 정의된 국가 인공지능 비전을 기반으로 두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 사례는 물류·운송,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등의 우선 분야 해당
 - ② 인공지능 기술 기반·정책)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추진하면 경제, 사회, 환경 및 보안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잠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나, 그 전에 정부는 적절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립이 필요
 - ③ 인공지능 산업 발전)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정의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요가 명확해지고 이는 인공지능 공급, 산업 발전, 연구·혁신 생태계 성장 등으로 연결
 - ④ 인공지능 촉진 요소) 인공지능 기술 채택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수립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마련 ▲공공·민간 부문 투자 유치를 통한 연구개발(R&D) 자금 조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소통 등이 필요

〈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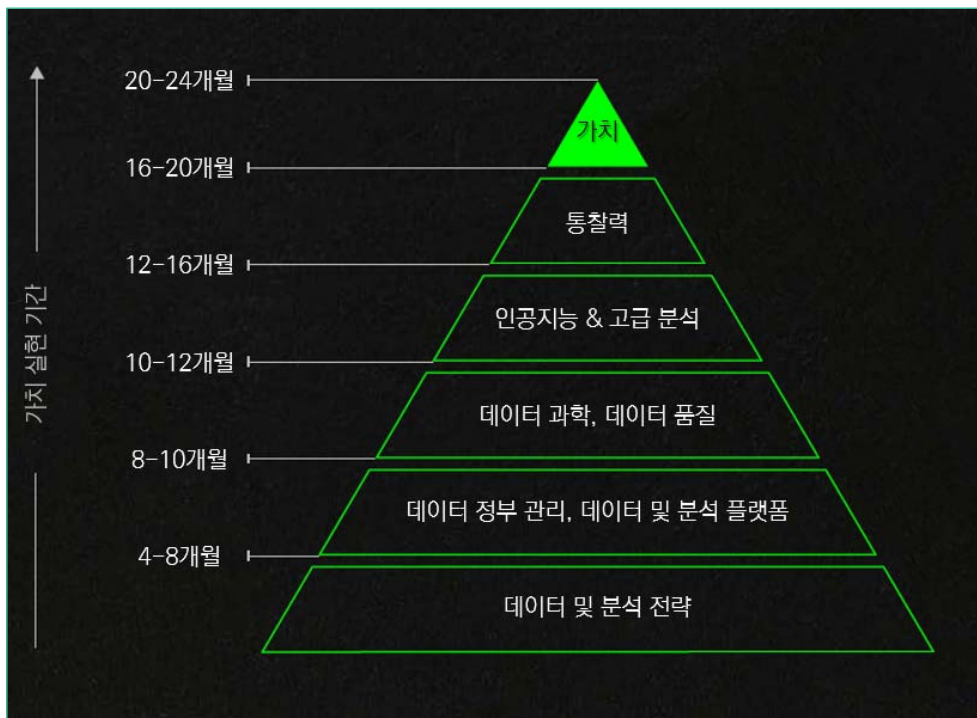


7) National AI Framework in Government Services

4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적용 접근법

- 아랍에미리트 정부 기관의 전통적인 인공지능 도입 접근법은 효과적이지만 가치 실현을 지연시킨다는 단점이 발생
 - 기존에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 폭포수(Waterfall) 방식⁸⁾을 활용
 - 폭포수 방식은 ①데이터 및 인공지능 전략 정의, ②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반 인프라 구축, ③데이터 품질 모니터링 및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데이터 분석 활동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침
 - 위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④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통한 통찰력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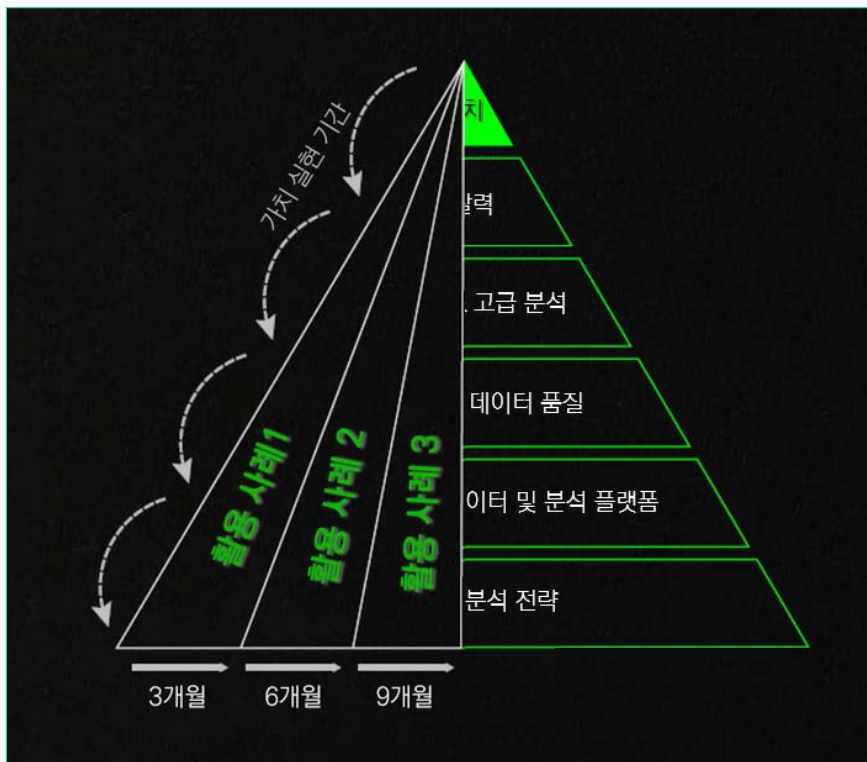
〈 AS-IS : 전통적 폭포수 방식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



8) 폭포수 모형(Waterfall model)은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의 하나로, 개발 공정을 요구 사항 분석,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구현, 시험 및 유지 보수의 몇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성과를 문서로 명확하게 확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체계적이며 순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으로 불림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애자일(Agile) 접근법⁹⁾을 채택하길 권고
 - 이는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활용 사례 중심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실행 가능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활용 사례를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춘

〈 TO-BE : 애자일 접근법으로 인공지능 기술 도입 〉



9) 애자일 모형(Agile model)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협력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프로젝트의 생명주기 동안 개발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고객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반복적, 점진적인 계획을 통해 요구사항의 변화를 관리하고 또한 문서 작업보다 코딩과 테스트 기반의 접근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임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활용 사례 개발 단계는 다음 네 단계로 진행
 - ① 발견(Discovery) 단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활용 사례를 식별하고 가치와 실현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 지정
 - ② 시작(Initiation) 단계: 우선순위가 지정된 활용 사례에 대한 세부 계획 및 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
 - ③ 실행(Execution) 단계: 실행 프로세스 시작과 개발 환경 설정, 데이터 확보, 모델 구축, 투자자본수익률(ROI¹⁰⁾ 및 가치 평가
 - ④ 운영(Operations) 단계: 활용 사례 배포 후 적절한 거버넌스와 유지관리를 보장하고, 필요시 가치와 확장성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

5 인공지능 도입·적용 관련 주요 고려사항

-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를 인식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츄어(Accenture)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C-suite)의 84%가 인공지능 활용이 기업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76%의 응답자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 **(인재 부족)** 대부분의 인공지능 선도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유치·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 인재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업,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선제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 **(데이터 격차)** 인공지능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며, 정부 기관은 국가 데이터 정책·규제에 따라 데이터 관리·활용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
 - 정부 기관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품질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기존 데이터 격차를 인정하고

10) Return On Investment

외부 협력업체 활용, 데이터 프록시¹¹⁾ 사용, 재현 데이터¹²⁾ 개발 등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기능팀, 산업팀 및 기술팀 간의 조정)** 기존 조직 구조는 기능팀¹³⁾, 산업팀¹⁴⁾ 및 기술팀¹⁵⁾ 간의 효과적인 협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 되며, 협업을 도모해야 함
 - 기능팀과 산업팀은 없이, 기술팀만 참여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업은 실제 채택되지 않음
 - 기술팀 없이, 기능팀과 산업팀만 참여한 인공지능 사업은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역량의 부재로 기획·설계 단계 후, 실제로 시스템 구현으로 이어지지 않음
 - 따라서, 기능팀, 산업팀, 그리고 기술팀의 역량을 모두 결합한 POD(Product-oriented delivery) 팀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

- **(사이버보안 위험)** 공공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 시, 사이버보안 관점에서의 다양한 취약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보안 운영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

- **(기타 고려사항)**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위험, 운영·법적 결함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과 위험 관리 능력 향상도 필요

11) 데이터 프록시(Data Proxy)는 누락되거나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소스를 유사하거나 관련된 기존 데이터 소스로 대체하는 방법 (출처: Open Risk Manual)

12) 재현 데이터(Synthetic data)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재현하여 생성한 가상 데이터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나 학습에 사용될 실제 데이터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 사용 (출처: TTA 정보통신용어사전)

13) 같은 부서에 속한 팀원들로 구성되며, 흔히 물리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영구적인 팀 (출처: Pragmatic Thinking.com)

14) 특정 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흔히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며 보고서 등의 산출물을 제출 (출처: British Information Services(1952), 『Labor and Industry in Britain』, U.S. Coast Guard & Tetra Tech, Incorporated(2022), 『Integrated Deepwater System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15) 조직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부서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ISSUE

②

OECD, 세계 디지털 무역 및 정책 백서 발표

Reading Point

- OECD는 새롭게 발간된 무역 정책 백서('23.5.)¹⁶⁾를 통해 전 세계 디지털 무역의 실태 및 정책의 발전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무역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분석
- 본 백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가시화되고 정량화된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실질적인 국제 디지털 무역 논의를 촉진하며, 국가 단위에서의 디지털 무역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개요

- 디지털화는 국제 무역 참여 비용을 줄이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무역의 혜택을 누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하지만 디지털 무역의 실체와 발전 양상에 관한 정확한 규명·정리가 부족
 - 특히 기존 데이터의 한계가 무역 데이터·디지털 무역 정책의 측정 및 분석을 제한
 - 그러나 최근 무역 데이터베이스가 개선되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등장에 힘입어 관련 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
- 이에 따라 OECD는 2023년 5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공동 이니셔티브, 지역무역협정(RTA) 디지털 무역 조항, 또는 신규 디지털경제협정(DEA)의 맥락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디지털 무역 논의 촉진을 위한 백서를 발간¹⁷⁾
 - 동 백서는 ①디지털 무역 및 관련 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②디지털 연결과 디지털 무역 정책이 무역 비용과 무역 흐름에 미치는 정량적 영향을 분석
- 이하에서는 본 백서에서 기술된 ▲디지털 무역의 개념, ▲전 세계 단위에서의 관련 정책의 발전과 특징 및 ▲디지털 경제·무역 협정 체결 양상을 중심으로 정리

16) OECD(2023.5.), Of Bytes and Trade: Quantifying the Impact of Digitalisation on Trade

17) 각주 16번 참고

II '디지털 무역' 정의 및 추산 근거

-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은 '디지털로 제공되거나(delivered) 주문한(ordered) 모든 무역'이라 정의할 수 있음¹⁸⁾
 - 현재 추진되는 디지털 무역량 측정 연구에 미미한 수준의 무역 거래량¹⁹⁾이 누락될 수 있으나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통계가 전반적으로 디지털 무역의 규모를 대표
 - 하지만 전반적 무역 통계치 중 디지털 무역 가시성(visibility)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로 제공되거나 주문된 무역을 확인·식별 작업이 필요

- 포괄적이고 비교 가능한 공식 디지털 무역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①디지털 제공과 ②디지털 주문은 다양한 '대리 지표(proxy measures)'를 사용하여 근사치 추산이 가능
 - ① **디지털 제공** 디지털로 제공된 모든 무역이 실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라는 가정하면, ▲ICT 서비스 무역(예: 컴퓨터 및 통신 서비스)과 ▲기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무역(예: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의 2가지를 대리 지표로 활용
 - ※ ICT 서비스(국제표준산업분류(ISIC) 61, 62, 63) 및 기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ISIC 58~60, 64~66, 69~82)로 구성
 - ② **디지털 주문** 상품 및 서비스 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주문 무역은 식별 작업이 한층 까다로우며, 이 백서에서는 비디지털 부문에 대한 디지털 투입가치(digital input)²⁰⁾를 디지털 주문 무역의 대리 지표로 활용
 - 본 보고서는 상기의 추산 방법론에 따라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규모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으며, 상세 결과를 제시

18) 참고자료: OECD, WTO and IMF(2020), Handbook for Measuring Digital Trade- Vers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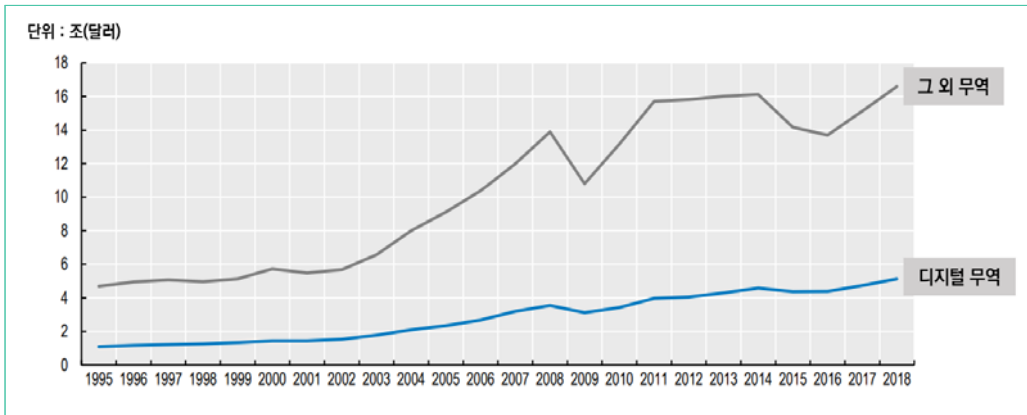
19) 핸드북에 'de minimis trade'라고 표현하며, 부가가치 기준에 최소허용기준 또는 무관세한도액을 말함

20) ICT 상품·서비스, 디지털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비디지털 부문의 수출에 투입된 디지털 가치를 산출한 것. 디지털 투입가치의 예시로는 ▲컴퓨터 등과 같은 ICT 제품, ▲이동통신 서비스 등과 같은 ICT 서비스, ▲택시·승차공유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을 포함

전 세계 디지털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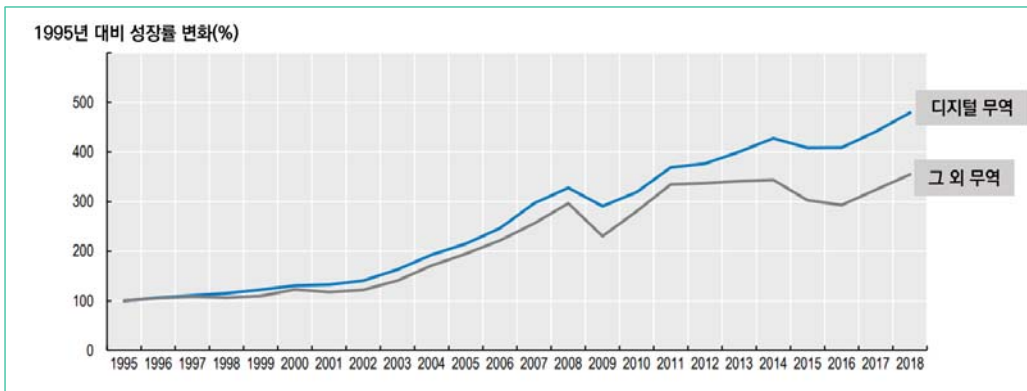
- **(디지털 무역의 가치)** 전 세계 디지털 무역은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며, 디지털 무역량은 1995년 이후 1조 1,000억 달러에서 2018년 5조 1,000억 달러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

< 전 세계 디지털 무역 및 비디지털 무역량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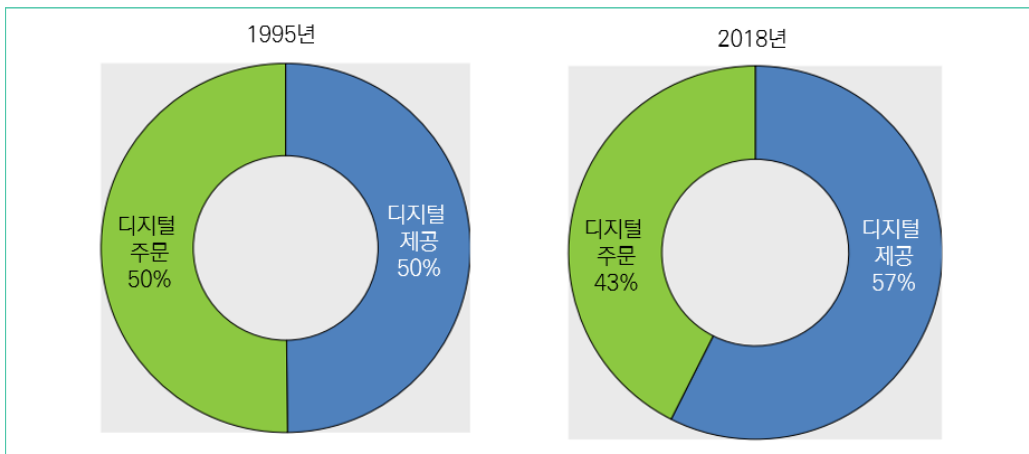
- **(디지털 무역의 성장률)** 1995년에 전체 무역 중 디지털 무역의 비중은 19%이었으며, 2018년에는 전 세계 무역의 약 24%를 차지
 - 또한 디지털 무역은 '비디지털' 무역 대비 약 1.3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

< 전 세계 디지털 무역 및 비디지털 무역 성장 추이 >



- **(디지털 무역의 구조)**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구조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디지털 제공' 무역이 전체 디지털 무역의 약 50%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중이 57%까지 증가
 - 이러한 성장은 2018년에 디지털 무역량이 7.3%에서 13.5%로 늘어난 ICT 서비스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
 - 전반적으로 볼 때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디지털 제공 부문이 점차 확대되며 상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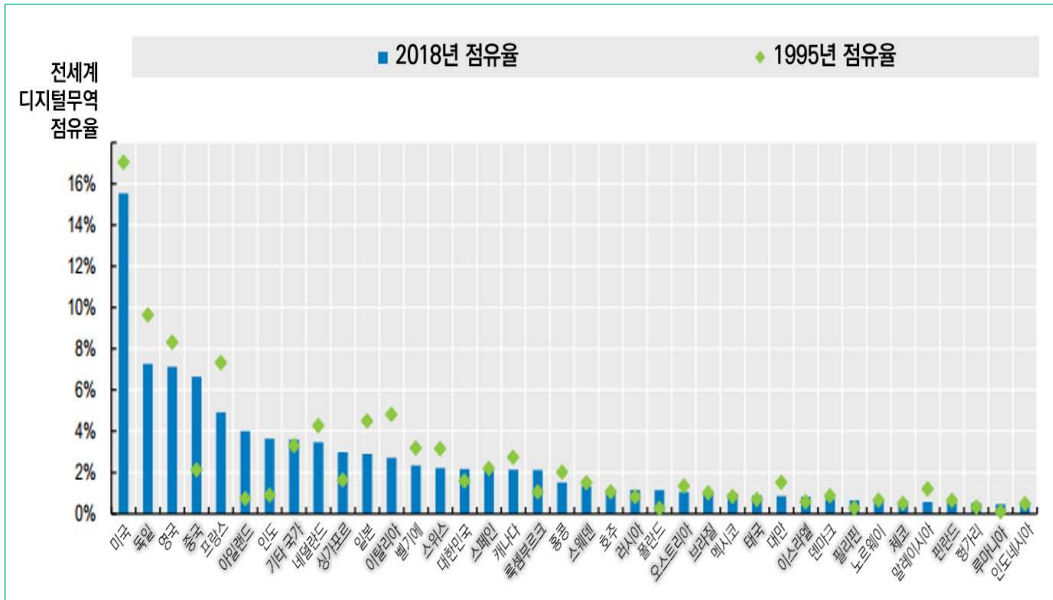
〈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구조의 변화 (1995, 2018년 비교) 〉



- **(국가별 디지털 무역 점유율)** 디지털 무역의 국가 간 지형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1995년에는 OECD 국가가 전 세계 디지털 무역 수출 추산치 중 82%를 차지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중이 73%로 감소
 - 미국은 2018년에도 여전히 전 세계 디지털 무역 수출 추산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15.5%), 1995년 이후 1.5%p 감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디지털 무역 추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이후 2%p 이상 감소
 - 이에 반해 중국은 1995년 2%에서 2018년 6.7%로 점유율이 상승했으며, 디지털 무역 추산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非)OECD 회원국

- 중국의 뒤를 이어, 인도가 전 세계 디지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4%로 4배 증가
 - ※ 아일랜드의 증가율과 유사
- 싱가포르도 디지털 무역 추산치가 1.6%에서 3%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음

〈 주요국 디지털 무역 점유율 변화²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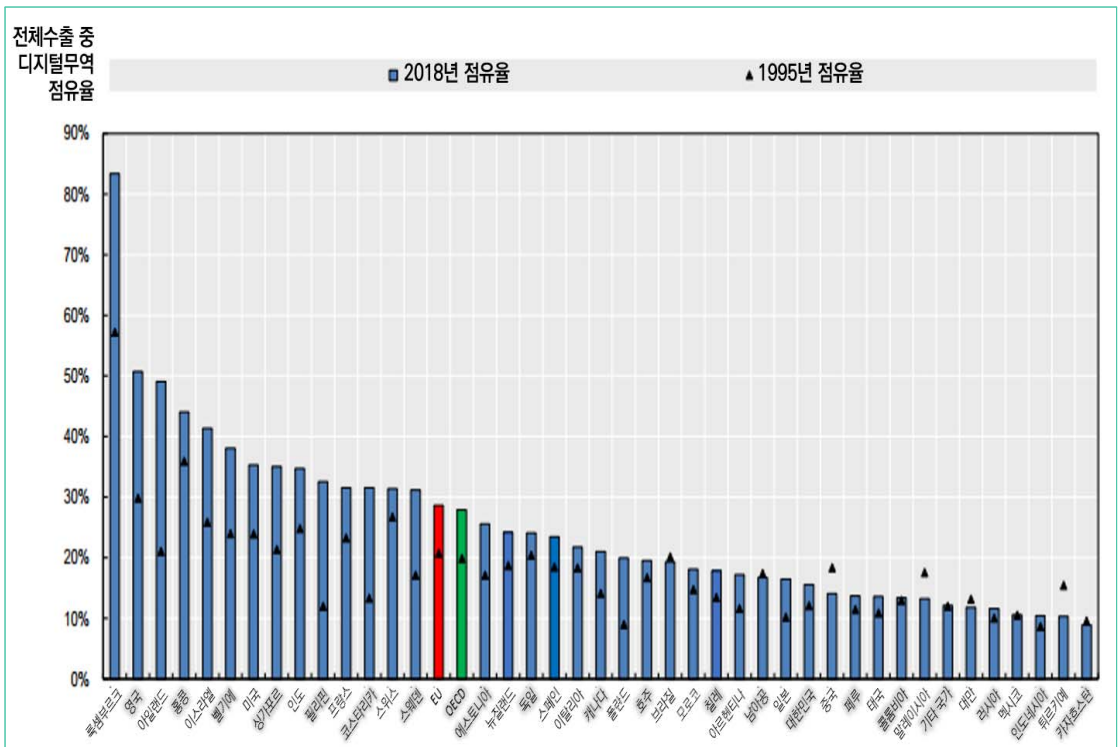


21) 집계 대상 국가는 OECD의 2021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added) 데이터베이스 개정판의 66개 국가 및 '기타 국가(ROW, Rest of the world)'의 평균치. 66개 국가는 ▲OECD 회원국인 38개국과 ▲주요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 국가로 구성된 28개국을 포함

※ 참고자료 :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106160#>

- (국가 수출 중 디지털 무역) 전체 교역량 중 디지털 무역 추산치의 비중은 점차 확대 중
 -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의 경우 디지털 무역량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 (2018년 기준)
 - ※ 1995년 대비 57% 증가
 - 룩셈부르크에 이어서 영국(51%) 아일랜드(49%) 순으로 디지털 무역량의 비중이 큼
 - 상위 10위권에는 디지털 무역이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한 인도와 미국도 포함
 -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디지털 무역량이 전체 수출의 4%에 불과

〈 주요국 전체 수출 중 디지털 무역 점유율 변화 〉



다자간 디지털 무역 정책

- 디지털 무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WTO 공동 이니셔티브, 지역무역협정(RTA²²), 디지털경제협정(DEA²³) 및 국가 규제 개혁을 통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

1 WTO 공동 이니셔티브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간 논의는 1998년 WTO의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²⁴’ 채택이 최초의 단초를 제공
 - 같은 해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거래에 대한 관세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 유예를 정기적으로 연장
 - ※ 가장 최근 유예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
- 그러나 이후 디지털 무역에 대한 논의는 더디게 진전했으며, 2019년 1월에 비로소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I)²⁵’를 통해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된 향후 WTO 협상을 위해 공동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
 - 2023년 2월 초 시점 ‘전자상거래 JI’에는 88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 서명 및 전자 결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자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흐름,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사이버보안 및 시장 접근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WTO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I) : 주요 논의 분야 〉

논의 분야	주요 내용
1.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거래 촉진 (전자 거래 프레임워크, 전자 인증 및 전자 서명, 전자 계약, 전자 인보이스) • 디지털 무역 촉진 및 물류 (페이퍼리스 거래)

22) Regional Trade Agreements

23) Digital Economy Agreement

24) Work programme on e-commerce

25) Joint Initiative (JI) on e-commerce

논의 분야	주요 내용
2. 개방성 및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전송 거래에 대한 관세 인터넷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공공데이터 개방,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사용)
3. 신뢰와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보호 (온라인 소비자 보호, 스팸과 같은 상업성 전자 광고 메시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개인데이터보호) 사업·기업 신뢰(소스코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ICT 상품) 사이버보안
4. 공통 이슈 (Cross-cutting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의 흐름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국경 간 데이터 흐름, ▲컴퓨팅 시설의 위치, ▲금융 정보·금융업체의 컴퓨팅 시설 위치) 투명성, 국내 규제 및 협력 (투명성, 협력 및 협력 메커니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방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을 위한 이행 기간 개발도상국 회원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조항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방안)
5. 이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규정 (범위, 정의, 경쟁제한성,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라이선스 및 인허가, 이동통신, 규제당국, 희소 자원의 할당 및 사용, 필수 설비, 분쟁 해결)

- 2023년 1월에 발표된 호주-일본-싱가포르 3개국 간 WTO 공동 성명서²⁶⁾에서는
- ① 페이퍼리스(paperless) 거래, ② 전자계약, ③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④ 원치 않은 상업성 전자 광고 메시지²⁷⁾, ⑤ 온라인 소비자 보호, ⑥ 공공데이터 개방, ⑦ 개방형 인터넷 접근, ⑧ 투명성, ⑨ 사이버보안, ⑩ 전자거래 프레임워크 등 10개 조항에 대해 합의 도출
 - 또한 이들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²⁸⁾ 등 데이터의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항에 대한 더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과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합의 도달을 희망한다고 언급
 - 개인정보 보호와 ICT 상품 및 암호화 기술 사용에 대한 새로운 소그룹 논의도 새롭게 시작

26) WTO(2023.1.20.), WTO Joint Statement Initiative on E-commerce: Statement by Ministers of Australia, Japan and Singap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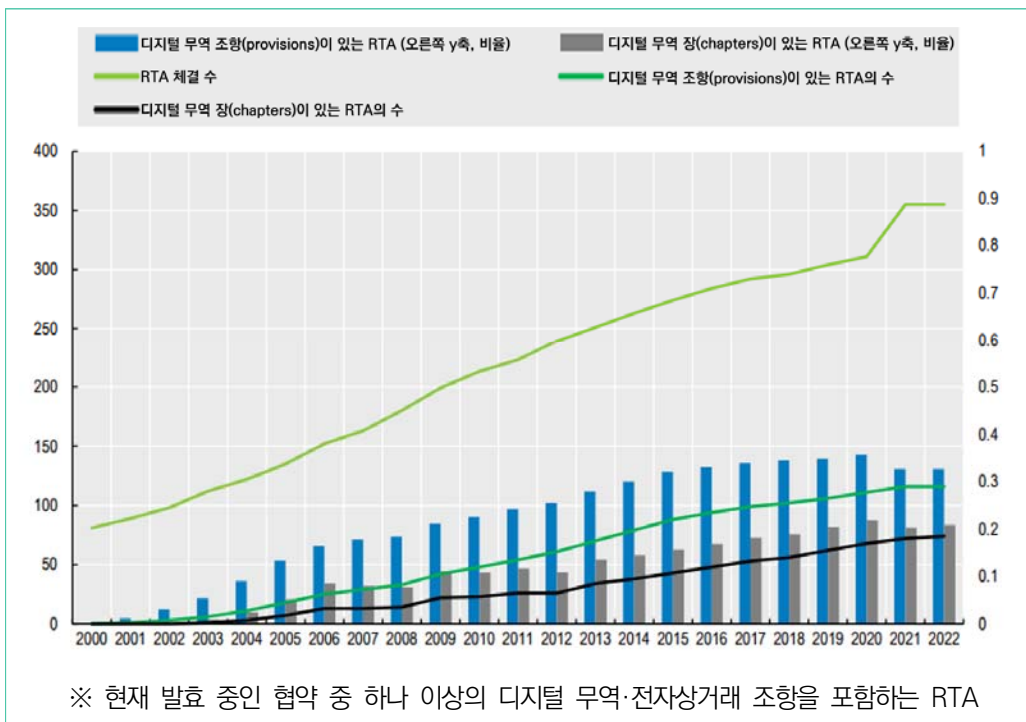
27) 스팸과 같은 광고성 메시지를 포함

28)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는 해당국 안에서만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즉, 특정국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 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도록 한 규정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② 국가 간 무역협정 내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 디지털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WTO 내에서보다는 주로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RTA²⁹⁾)의 맥락에서 이뤄짐
 - 실제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조항(provisions)이 반영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이후 350건을 상회³⁰⁾
 - 2022년 6월까지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조항이 포함된 협정은 이 중 116개로 전체 협정 건수의 33%를 차지
 - 이 중 74개 협정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장(chapter)으로 구성
 - ※ 전체 협정의 21%를 차지
 - 또한, 2001년 이후 체결된 협정 중 44%가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조항을 반영

〈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내 디지털 무역 조항·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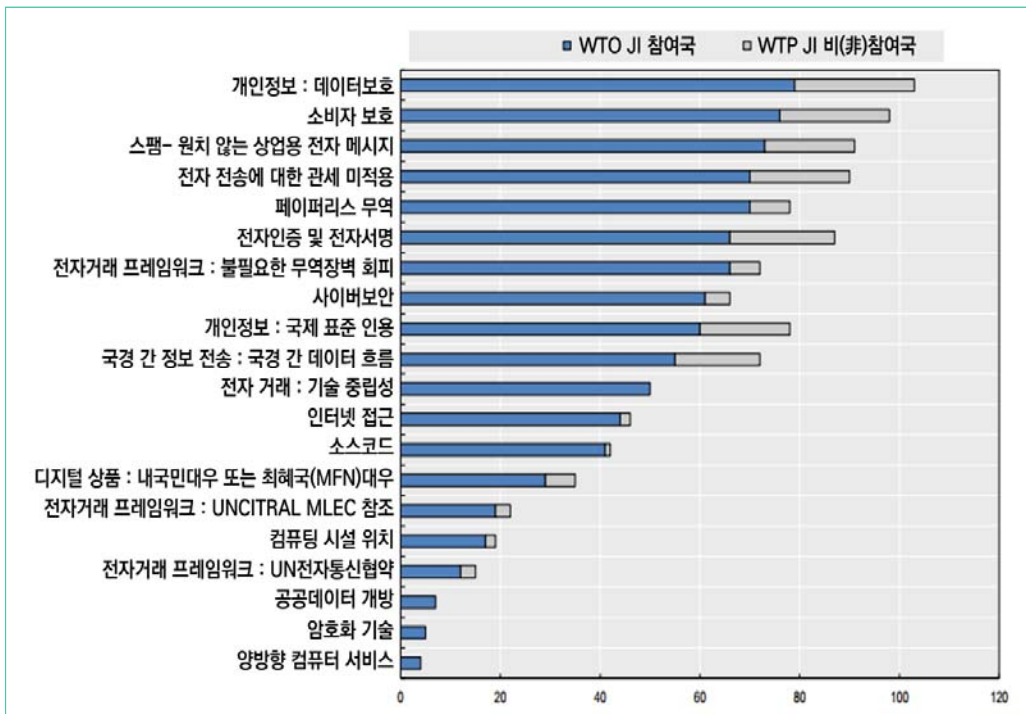
29) Regional Trade Agreements

30) 참고자료 :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관련 무역협정조항(TAPED)’ 데이터베이스

<https://www.unilu.ch/en/faculties/faculty-of-law/professorships/burri-mira/research/taped/>

- 무역협정 내 디지털 무역 조항은 상품·서비스의 디지털 무역과 연관된 다양한 이슈를 반영
 - 이러한 조항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통신, 금융 등에 관한 장(chapter)에 포함될 수도 있음
 - 이외에도 디지털 무역 조항은 ▲전자 인증 프레임워크, 페이퍼리스 거래 등의 디지털 무역 촉진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소스코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및 ▲사이버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 OECD 조사³¹⁾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 조항 내에서 여러 주제 또는 이슈가 다뤄졌으며 WTO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I) 논의에 참여하는 국가와 참여하지 않는 국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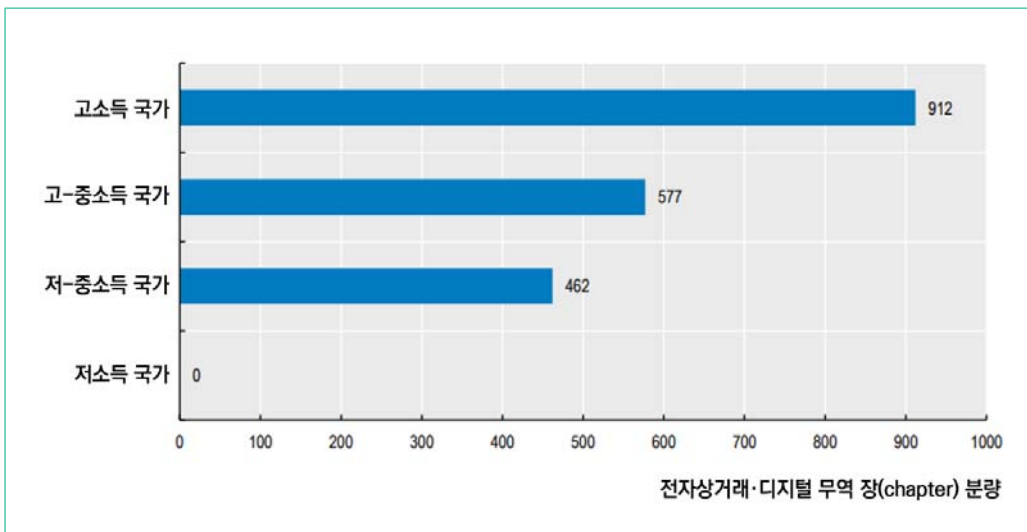
〈 무역협정 중 디지털 무역 조항이 다룬 이슈 〉



31) OECD(2021), Digital Trade Inventory: Rules, Standards and Principles

- 무역협정 내 전자상거래 장(chapter)은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 간의 협정 체결에서 반영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소득 국가들일수록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조항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고소득 국가의 협정에서 전자상거래 장의 분량은 중저소득 국가의 협정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함
 -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전자상거래 장이 포함된 지역무역협정(RTA)를 체결한 국가가 없음

〈 경제소득 그룹별 전자상거래 조항 관련 단어 수 〉



③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 협정과 이니셔티브의 등장

- 디지털 경제 협정은 최근 국가 간 다양한 형태 및 새로운 이슈를 포괄하며 체결
 -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 간의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³²), '22.8.)과 호주-싱가포르 간의 디지털경제협정(SADEA³³), '20.12.)이 대표적 사례
 -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5개의 디지털 경제 협정이 발효된 가운데, 이들은 모두 기존 지역무역협정(RTA)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 예시로, DEPA에 참여한 3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³⁴)에 이미 참여

< 디지털 경제 협정별 이슈 범위 비교 >



- 최근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협정은 기존 지역무역협정(RTA)에서 논의된 이슈는 물론, 인공지능, 디지털 ID,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대한 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를 확장

32)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33) The Singapore-Australia Digital Economy Agreement

3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예를 들어,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 간의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과 호주-싱가포르 간의 디지털경제협정(SADEA)는 RTA에 포함되지 않는 인공지능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이러한 조항의 내용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협정 국가 간 가치 공유와 지속적인 대화·협력 촉진의 일환으로 추진
 -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심화하고 새로운 기술, 비즈니스 모델 및 규제 과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실행적 협약(living agreement)’의 특징을 지님
- 최근 급격한 기술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가들은 국제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에 대해 유연하고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응 중
- 최근 중국(‘21.11.), 캐나다(‘22.5.), 코스타리카(‘23)가 DEPA 가입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10월 DEPA 정식 가입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는 등 일련의 국가 간 공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 또한, 영국과 우크라이나는 2022년 11월 디지털무역협정(DTA³⁵)에 합의했으며, 2023년 1월에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³⁶)이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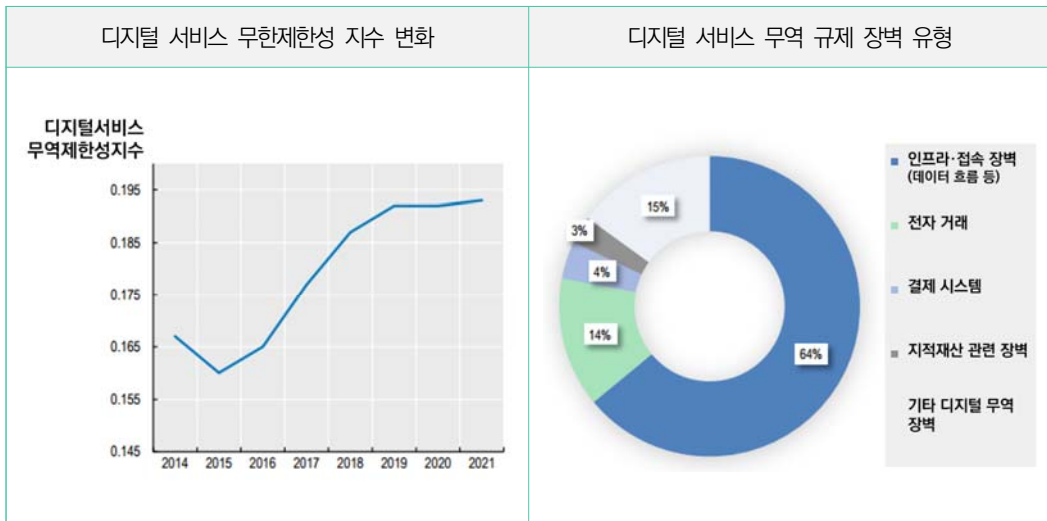
35) Digital Trade Agreement

36)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4 디지털 거래 규제 증가

- 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성 지수(DSTRI³⁷)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단위의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데이터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및 접속성과 관련된 규제가 증가

<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변화³⁸ >



-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성 지수(DSTR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74개 국가 간 디지털 무역 규제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
 - 2022년 DSTRI 데이터베이스는 아프리카, 남미 및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까지 포괄
 - 2022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OECD 회원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평균 규제 수준은

37) Digital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

DSTRI 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무역 규제가 심한 환경을 의미

※ 참고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2022.3.), 주요 국가별 맞춤형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 수립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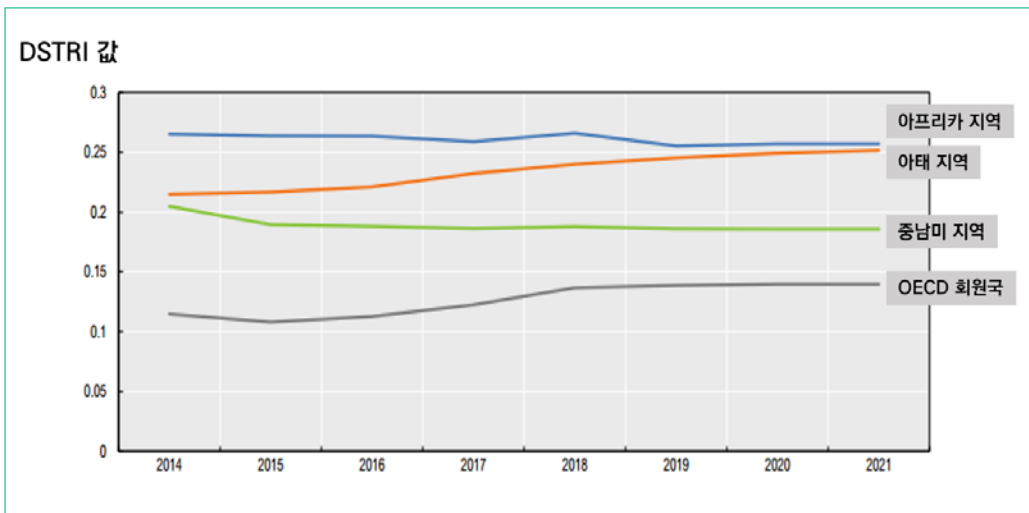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13727&sel_year=2022&sel_month=05&pp=20&pg=1

38) 집계 대상 국가는 OECD의 2022 DSTRI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74개 국가이며, ▲OECD 회원국인 38개국 외에도 ▲인도, 남아공,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를 포함

※ 참고자료 : <https://goingdigital.oecd.org/en/indicator/73>

-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 보다 낮게 나타남
-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낮추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 ※ 2014년부터 2022년까지 DSTRI 값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OECD 및 지역별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 변화 〉



V

평가 및 국내 시사점

- 이번 OECD 백서는 기존 무역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디지털 무역을 디지털 주문과 디지털 제공 무역으로 구분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무역 통계의 기반을 가시적으로 제시
 - 디지털 부문의 무역이 비디지털 무역 대비 전체 무역 내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디지털 제공’ 부문의 비중의 증가는 디지털 무역 내 상품이 서비스로 전환됨을 데이터로 검증
 - 또한, 국가별로는 최근 중국, 인도 등 방대한 경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량을 크게 늘리며 전 세계 디지털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함

- 기술 패권 경쟁 속에 세계 각국은 신기술 공급망을 고려한 전략적 양자·다자간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하고 있음
 - 최근 반도체, 통신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주요국 간의 참여확대에 따라 기존의 WTO나 OECD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체계 내 디지털 무역 규범의 확립은 적지 않은 난제로 남겨짐
 -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 체결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관련 국가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적 선택지로 부각
 - 우리나라의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이나 최근 가입 협상 타결이 임박한 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³⁹⁾ 등도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노력의 결과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 국내 디지털 통상 수요를 반영한 전략 개발이 중요
 -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경우, 높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나 보편적 합의 도출이 힘들다는 한계를 지님
 -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및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 구도의 변화는 양자 및 다자간 디지털 무역 협력 체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3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6.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조속 타결 추진

- 따라서, 기술 및 산업적 맥락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입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급망 협력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디지털 무역 공조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 국제 디지털 무역 규범을 고려한 국내 디지털 규제 개발 역시 핵심 과제로 대두⁴⁰⁾

- 국내에서도 ‘GovTech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선언하고(‘23.4.)⁴¹⁾, 데이터3법 등 디지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정책 환경 개선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으나 국내와 국제 규범 간의 조화 고려가 필요
 - ※ 데이터3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조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 변화가 없어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관련 논의에 뒤처질 수 있음
- 또한, 현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 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디지털 통상 환경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
- 특히 내년 중 디지털세 부과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경우 해외 진출 국내 IT 기업과 수출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디지털세 발효 시 쟁점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해외 기업에 대한 조세 수입과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수출 경쟁력 방어 등을 조화롭게 고려한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
- 또한, 우리나라가 참여한 양자·다자 간 디지털 공조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OECD 디지털 논의 대응 필요

40) 참고자료 : 손창우(2021), 한·중 디지털 무역 동향과 무역규범의 글로벌 쟁점
이규엽·이천기·최원석·엄준현·황운중(2022), 디지털 무역협정 전략 로드맵 연구
김흥종(2020), 디지털 무역 규범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대응

41)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3.4.17.),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합동 브리핑

미국 및 중국, 인공지능 규제·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⁴²⁾

-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⁴³⁾ 절차를 개시
 -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국(NTIA)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향후 공개 의견 수렴을 추진('23.4.11. ~ '23.6.12.)
 - * 인공지능에 대한 감사, 평가, 검증 메커니즘 개발 및 향후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해 진행되며, 주요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 평가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산업별 효과적인 적용방법 등
 - 한편, 미국 상무부는 '23년 3월 발표한 보고서⁴⁴⁾를 통해 향후 정책입안자들이 효과적인 인공지능 규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 안보 등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

-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규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조치 방안을 발표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은 인공지능의 정확성 및 프라이버시 보장, 지적재산권 보호, 차별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⁴⁵⁾ 관리방안 초안을 발표('23.4.11.)⁴⁶⁾
 - ※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 제20조로 구성됨
 - 중국 정부가 발표된 관리방안 초안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23.4.11. ~ '23.5.10.)을 거쳐, '23년 중 시행될 예정

42) Forbes(2023.4.11.), U.S. Government Is Seeking Public's Input On How To Regulate Artificial Intelligence

43)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2023.4.11.), AI Accountability Policy Request for Comment

44) U.S Chamber of Commerce(2023.3.9.),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veness, Inclusion, and Innovation

45) 콘텐츠의 패턴을 학습하여 추론 결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생성자와 만들어진 콘텐츠를 평가하는 판별자가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기술

46)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23.04.11.),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办法 (征求意见稿)

http://www.cac.gov.cn/2023-04/11/c_1682854275475410.htm

- 해당 관리방안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의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콘텐츠 공개 전 보안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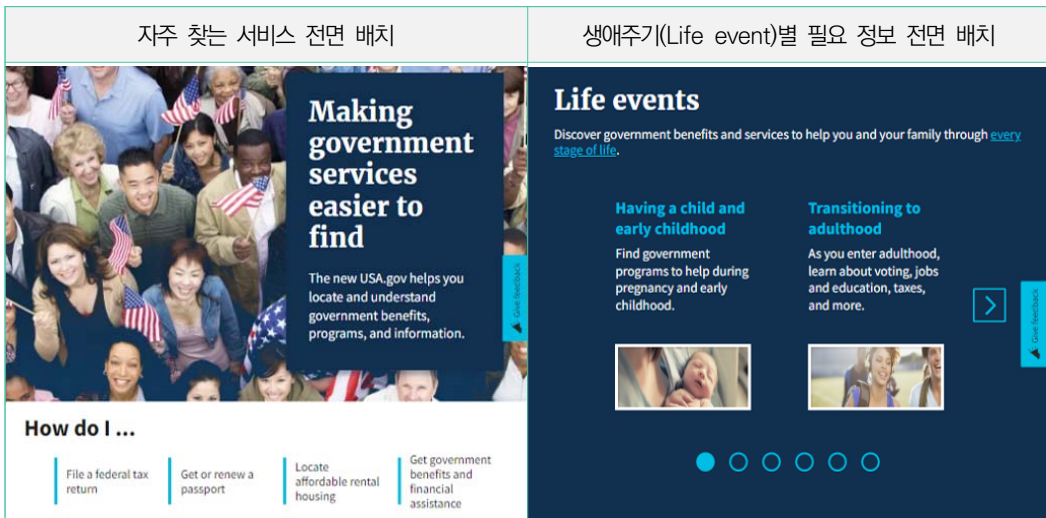
〈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방안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산된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권력 전복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말 것 •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학습 등의 과정에서 민족, 인종, 국가 등의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된 콘텐츠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정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网信部)에 보안평가를 제출할 것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훈련데이터 출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것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산된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할 것

NEWS 2 ▶ 미국, 신규 개편된 정부 웹사이트 공개⁴⁷⁾

- 미국 연방총무청(GSA⁴⁸⁾)은 시민들이 정부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된 연방정부 웹사이트(USA.gov)를 공개
 - 이번 정부 웹사이트 개편은 '21년 12월 미 백악관이 발표한 “정부에 대한 신뢰 재구축을 위한 고객 경험 및 서비스 제공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⁴⁹⁾”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수개월간의 베타 테스트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
 -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이 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이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데이터를 반영
 - 또한, 사용자 피드백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여 향후 음성 인식 기술, 대화형 기능과 같은 추가 편의 제공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 미국 연방정부 웹사이트 홈페이지 〉



47) MeriTalk(2023.4.19.), GSA Unveils Newly Redesigned USA.gov Websites

48)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49) The White House(2021.12.13.), Executive Order on Transforming Federal Customer Experience and Service Delivery to Rebuild Trust in Government

- 새롭게 공개된 정부 웹사이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자신이 필요한 정부 정보 탐색 및 공공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해질 전망
 - 신규 웹사이트는 다양한 정부 부처, 담당자 연락처 등 복잡한 정보들을 불필요하게 나열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 및 생애주기별 필요 정보 등을 전면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 * 사용자는 첫 화면부터 ▲연방정부 세금 신고, ▲여권 갱신, ▲임대 주택 찾기, ▲정부 혜택 및 재정지원 등의 배너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아래에는 주요 생애주기별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살펴볼 수 있어 추가적인 검색이나 별도의 웹사이트 이동이 불필요
 - 웹사이트 및 콜센터 채널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최적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

〈 주요 생애주기별 정부 서비스 〉

구분	주요 제공 서비스
출산 및 육아 (Having a child and early child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 자녀 육아에 필요한 정부 지원 및 정책 프로그램 • (예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자녀 사회보장카드 만드는 방법
청소년 및 성인 (Transitioning to adulth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일자리, 교육, 세금 등 성인기를 진입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 (예시) 유권자 등록 방법, 학자금 대출, 정부 일자리 교육·지원
은퇴기 (Approaching reti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혜택 등 은퇴를 앞둔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 (예시)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보험 신청 방법, 은퇴 설계 지원
재정적 어려움 (Facing financial hard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 (예시) 식료품 지원, 임시 거주 지원, 공과금 지원
재해 피해 복구 (Recovering from a disas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재해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각종 정부 서비스 • (예시) 긴급 대출, 공과금 지원, 임시 숙소 지원, 재난 실업 수당
사망, 장례 (Dealing with the death of a loved 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친지 등의 사망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 및 각종 지원 서비스 • (예시) 사망증명서 발급, 사회보장국(SSA⁵⁰) 통보 방법, 사망 군인 유가족 혜택 지원 방법

5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미국 연방정부 웹사이트(USA.gov) 주제·서비스 메뉴 항목 〉

구분	항목별 설명 및 주요 제공 서비스
정부 소개 (About the U.S. and its Government)	• 미국 정부 부처 설명, 선출직 공무원 관련 정보
불만 제기 (Complaints)	• 정부기관, 여행, 서비스, 금융 등에 대한 고객 불만 제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Disability Services)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부 혜택 및 프로그램
재난·긴급상황 (Disasters and Emergencies)	• 재난 또는 긴급상황 관련 재정 지원 서비스
교육 (Education)	• 대학 학자금 지원, 공공 도서관 이용 관련 정보
정부 보조금 (Government Benefits)	• 식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생활비 지원 관련 정보
건강·의료 (Health)	•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정신상담 등 공공 의료 서비스 정보
주거 지원 (Housing Help)	• 임대 주택, 주택 구입, 주택 수리 지원 프로그램 정보
이민 및 미국 시민권 (Immigration and U.S. Citizenship)	• 미국 영주권, 시민권 획득 자격 관련 정보 및 신청방법
일자리, 노동법 및 실업 (Jobs, Labor Laws and Unemployment)	• 일자리 탐색, 노동자 보호, 은퇴설계, 실업급여 관련 정보
법률 및 법적문제 (Laws and Legal Issues)	• 법률자문, 범죄 통계,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서류 진위확인 방법
군인 및 퇴역군인 (Military and Veterans)	• 군 입대 자격요건 및 접수방법, 병적증명서 발급, 퇴역군인 혜택, 직업훈련 신청 방법
화폐 및 신용 (Money and Credit)	• 정부 보조금, 정부 대출, 세금, 신용정보조회 등
사기·범죄 (Scams and Frauds)	• 각종 사기(공공기관 사칭, 실업수당 관련 금융 범죄 등) 신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Small Business)	• 소상공인, 소규모 창업 지원, 수출입 허가 관련 정보
세금 (Taxes)	• 연방 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환급금 확인 방법
여행 (Travel)	• 여권, 비자, 출입국 필요서류 등 관련 정보
투표 및 선거 (Voting and Elections)	• 유권자 등록, 후보자 정보, 선거법, 지난 선거 정보 등

NEWS 3 > 스위스 및 미국, 기상·기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

- 스위스 국립 기상청 메테오스위스(MeteoSwiss)는 기상·기후 데이터를 AWS⁵¹⁾ 클라우드로 이동⁵²⁾
 - 스위스 연방정부는 2022년 9월 AWS,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알리바바 등 5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
 - 계약 체결 후, 메테오스위스는 스위스 연방정부 기관 중 첫 번째로 데이터를 이전
 - ※ 현재 연방정부 기관 2곳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약 6개의 기관도 이전 가능성을 검토 중
 - 스위스 정부는 클라우드에 저장될 공공 데이터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강조
 - ※ 그 외 데이터는 스위스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서버에 호스팅될 예정

- 미국 공군은 군용 기상 예측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사업을 추진⁵³⁾
 - 미국 공군은 장병·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기상예보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2028년까지 진행하며, 1억 8,69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
 - 미국 공군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Solid State Scientific Corp.는 기상예보를 위한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VPC⁵⁴⁾)를 지원할 예정*
 - * 해당 사업은 미국 공군의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⁵⁵⁾의 가장 상위 과정인 3단계(Phase III)로 상당한 사업 규모와 사전 기획이 필요한 것이 특징

51)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의 약자

52) GovConWire(2023.4.18.), Switzerland national weather service moves data to the cloud

53) GovConWire(2023.5.8.), Air Force Taps Solid State Scientific for \$187M Weather Cloud Platform Modernization Project

54) Virtual Private Cloud

55)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미국 공군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쟁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업화 가능성과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R&D 프로젝트를 지원

참고자료: <https://www.sbir.gov/>

중국 지자체, 공공 부문 급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지급⁵⁶⁾

- 중국 창슈시 정부가 공무원 및 공공 부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급여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
 - 장쑤성(江蘇省) 내 15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창슈시(常熟市)의 국영 기업 직원과 교사, 의사, 간호사 등 모든 공공 부문 근로자는 2023년 5월부터 임금 전액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e-CNY로 지급받기 시작
 - 창슈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CBDC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e-CNY를 통한 교통 보조금 지급 실험을 실시
 - 중국 정부는 2020년 최초로 CBDC에 대한 실증 실험 이후 많은 중국 도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e-CNY를 실험해 왔으나, 이번 창슈시 사례와 같이 수십만 명에게 급여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한 것은 중국 내 최초의 시도

- 현재 중국 내 알리페이와 위챗 등 민간 기업 애플리케이션이 보편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중앙은행 주도의 e-CNY를 이용하는 디지털 결제의 확산은 더딘 것으로 평가됨
 -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 8월 중앙은행의 발표치에 따르면 거래 건수와 거래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 거래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월렛 수 통계 역시 2021년 12월 이후 공표를 중단
 - 이번 조치는 담보 상태를 맞은 e-CNY 보급의 활로 타개를 위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부문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eCNY 보급을 위한 강력한 주도권 행사는 방대한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단행될 수 있는 점에서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성공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창슈시의 사례와 같이 개인 임금을 CBDC로 지급할 경우, 개인의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존재
 - 이 경우, CBDC로 임금을 수령한 사람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일반 은행계좌로 이체 가능

56) Ledger Insights(2023.4.24.), China's digital yuan to be used for government wages

NEWS 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디지털 ID 출시⁵⁷⁾

- 최근 호주 내 통신사 및 의료보험 회사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디지털 ID의 필요성이 대두
 - 2022년 9월 호주 이동통신사 옵터스(Optus) 사이버 공격으로 가입 고객 약 1,000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⁵⁸⁾
 - 또한, 2022년 10월에는 호주 최대 의료보험회사(Medibank) 역시 사이버 공격으로 약 970만 명의 개인정보와 50만 명의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가 유출됐다 밝힘⁵⁹⁾
 - 이로 인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주민은 신원 도용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연간 예상 피해금액은 약 420억 달러로 추산

- 이에 따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NSW) 정부는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ID를 출시할 예정
 - 호주 NSW 주정부는 디지털 ID의 정식 출시에 앞서 2022년 11월 디지털 ID 관련 실증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3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진행
 - ※ 실증 테스트 결과, 전체 참가자의 90% 이상이 디지털 ID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⁶⁰⁾
 - 이번 디지털 ID 출시 계획은 2023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개인정보 보호 주간 (Privacy Awareness Week)” 캠페인에서 발표되었으며, 호주 NSW 주정부는 해당 캠페인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높은 수준의 보안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
 - 디지털 ID는 추가적인 시범 운영 및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이후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호주 NSW 주민은 기존 신분증과 함께 디지털 ID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될 예정

57) LSG Online(2023.5.2.), NSW Government set to launch Digital ID to protect online privacy

58) BBC(2022.9.29.), Optus: How a massive data breach has exposed Australia

59) TechCrunch(2022.10.2.), Medibank hackers declare ‘case closed’ as trove of stolen data is released

60) iTnews(2023.5.2.), NSW Digital ID is being tested by 36 people

- 디지털 ID는 안면 인식 기술 기반의 “사진 인증(photo verification)”을 통해 기존에 개인이 만든 신분증과 셀프카메라 사진을 대조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
 -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카드 등과 같은 개인 신분증을 미리 제출한 후에 디지털 ID 발급이 필요할 때마다 셀프카메라 사진을 촬영하면 애플리케이션 내 소프트웨어가 해당 사진들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
 - 디지털 ID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며, 촬영된 사진은 본인 확인 후 곧바로 폐기됨
 - 사용자는 운전면허 번호, 건강보험카드 정보,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생성된 디지털 ID만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면허발급, 보조금 신청,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음

〈 디지털 ID “사진 인증” 기술 작동 메커니즘 〉

구분	단계별 작동 방식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과정에서 촬영된 사용자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저장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인증 소프트웨어는 얼굴의 형상을 판독 • 눈 사이의 거리, 이마에서 턱까지의 거리 및 기타 생체인식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얼굴을 식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별이 완료된 사진을 운전면허증, 여권, 신분증 등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존재하는 기존 사진 데이터와 비교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최종 확인 결과가 표시되며 디지털 ID가 생성되고 촬영된 사진은 자동 삭제

NEWS 6

EU 집행위원회, 유럽 디지털 ID 월렛 시범 프로젝트 추진⁶¹⁾

-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디지털 ID(EUDI) 월렛'의 시범 운영과 기술 개발을 위해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4,6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발표
 - 이번 투자를 통해 다양한 일상적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DI 월렛의 활용법을 발굴·개발·테스트하기 위해 4개의 범유럽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 시범 프로젝트는 4개 사업에 걸쳐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결제 승인 ▲전자 문서 서명 ▲의료 처방전 제시 등의 활용 사례 (use-cases)를 검증 예정

〈 유럽 디지털 ID 월렛 시범 프로젝트 등장배경 〉

- 이번 시범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가 수립한 '유럽 디지털 ID 규정안⁶²⁾'의 일환으로 추진
 - 이를 위해 2023년 2월 집행위원회는 EU 내 파편화된 디지털 ID 기술을 공통된 기술 수단으로 통합하고, 회원국들의 디지털 ID 확산 촉진을 위해 '유럽 디지털 ID 월렛 툴박스'의 최초 버전을 공개⁶³⁾
 - 유럽 디지털 ID 월렛 툴박스를 통해 다양한 활용 사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월렛을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 확보를 도모
 - EUDI 월렛의 주요 역할은 시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럽 전역의 공공·민간 서비스 이용할 때 디지털 방식으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
 - 시민들은 EUDI 월렛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월렛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유되는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이 탑재될 예정

- **(주요 내용)** 4개의 시범 프로젝트에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다수 EU 회원국에 있는 250개 이상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참여하며, 최소 2년 동안 운영될 예정
 - EU 디지털 ID 생태계에 총 9천만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 중 EU 집행위원회가 50%의 공동 출자금을 투입할 예정

61) European Commission(2023.5.23.), EU Digital identity: 4 projects launched to test EUDI Wallet

62) European Digital Identity Regulation

63) 참고자료 : NIA(2023.5.8.), D.gov 해외동향 2023-2호 'EU 집행위원회, 유럽 디지털 ID 월렛 툴박스(v1.0) 공개'

- 시범 프로젝트는 총 11개의 주요 활용 사례 연구를 실시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전자 ID 수단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
- 시범 프로젝트는 사용자 월렛 발급에서부터 개인 ID 정보 통합, 문서 추가, 서비스 제공사에 ID 관련 정보 제시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디지털 ID 생태계 전반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

〈 유럽 디지털 ID 월렛 4개 시범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명	주관/참여 주체	프로젝트 활용 사례
포텐셜(POTENTIAL) : 유럽 디지털 ID 월렛 시범 사업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국) 독일, 프랑스 ▪ (참여국) 17개 EU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 (참여 주체) 50개 이상 공공 기관, 80개 이상의 민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서비스 이용 ▪ 은행 계좌 개설 ▪ SIM 카드 등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전자 서명 ▪ 전자 처방전
EWC : EU 디지털 ID 월렛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국) 스웨덴 ▪ (참여국) 18개 EU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 (참여 주체) 15개 이상 공공 기관, 40개 이상의 민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여행 자격 증명서의 저장 및 표시 ▪ 디지털 월렛 관리 ▪ 결제 시스템 체계화
NOBID : 노르딕-발트해 eID 월렛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국) 노르웨이 ▪ (참여국) 8개 EU 회원국 및 EEA 국가 ▪ (참여 주체) 5개 이상 공공 기관, 15개 이상의 민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렛 발급 - 금융 기관의 결제 수단 제공 - 소매 매장에서 결제 승인 절차
DC4EU : 유럽 컨소시엄용 디지털 자격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도국) 스페인 ▪ (참여국) 23개 EU 회원국 및 우크라이나 ▪ (참여 주체) 35개 이상의 공공 기관, 40개 이상의 민간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의 활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사회보장 패스⁶⁴⁾ 및 유럽 학습 모델⁶⁵⁾과의 연계성을 중심 테스트 - EUDI 월렛용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⁶⁶⁾) 활용 예정

64) European Social Security Pass

65) European Learning Model이며, 학습·역량증진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유럽 데이터 모델

66) European Blockchain Services Infrastructure

- 4개의 시범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상호 간에도 긴밀히 공조 하에 추진될 예정
-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는 eIDAS⁶⁷⁾ 전문가 그룹이 추진 중인 EUDI 월렛에 관한 기술 사양 개발 과정에 반영될 계획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시범 프로젝트 지원과 EUDI 월렛 기술 사양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오픈소스 기반 EUDI 월렛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으로, 이를 통해 회원국의 시범 사업과 EU 차원의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는 통찰과 솔루션을 제공할 것

○ **(기대 효과)** 유럽 디지털 ID 월렛 시범 프로젝트는 EU 회원국 및 노르딕 국가 간 시민 이주·이동에 따른 행정절차와 관련된 기술·제도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EUDI 월렛은 EU 시민이 다른 국가로 여행하고 이주할 때 수반되는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간소화시킬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EUDI 월렛 관련 대규모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현재 협상 중인 ‘유럽 디지털 ID 규정안⁶⁸⁾’의 발효에 앞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
- 이번 사업이 2030년까지 EU의 모든 거주자에게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eID 제공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⁶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유럽 디지털 ID 규정안’은 폴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디지털 월렛이 EU 회원국 전반에 걸쳐 통일된 표준을 기반으로의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EU 시민들의 국경 간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
- 또한, 시민은 자신이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월렛 사용은 시민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이 배제된 제도라 강조

67)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의 약자로, EU 내 기업 간의 전자적 상호작용이 더 안전하고 빠르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술 및 제도 프레임워크

68) European Digital Identity Regulation

69) Digital Decade Policy Programme

참고자료 : NIA(2022.10.26.), D.gov 해외동향 2022-6호 ‘EU 집행위원회, ‘2030 디지털 나침반’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을 마련’

호주, myGov 서비스 사용자 경험 관련 감사 보고서 발표⁷⁰⁾

- 호주 정부는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myGov’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감사 보고서를 발표
 - ‘myGov’는 호주 정부의 세금,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단일 플랫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⁷¹⁾
 - 감사 보고서에서, 호주 정부는 향후 ‘myGov’ 플랫폼 개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
 - * 장애를 가지거나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 호주인을 의미

- 호주 정부에서 임명한 다수의 전문가 패널이 ‘myGov’에 대한 사용자 감사⁷²⁾를 수행했으며, 특히 InnovationAus.com⁷³⁾ 주관으로 캔버라 지역의 패널과 토론회를 개최(‘22.11.)
 - 토론회 참석자들은 ‘myGov’ 사용자 감사가 모든 호주인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
 - ※ 특히 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기 힘들며,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정부 서비스에 접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
 -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지역사회의 가장 소외된 구성원이 ‘myGov’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개선사항이 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점을 최우선으로 반영되어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사용자 경험, 기능 및 성과, 정부 서비스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요소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현재 ‘myGov’는 번거롭고 사용하기 어려우며 정부 서비스 간

70) InnovationAus.com(2023.1.), Developing an improved myGov for all Australians-myGov User Audit Taskforce Issues Paper 2023

71) 참고자료 : <https://my.gov.au/en/about#access-government-services>

72) 참고자료 : <https://my.gov.au/en/audit>

73) InnovationAus.com은 호주 전역의 기술 기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관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독립적 언론사

사용자 경험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용자 관점에서 더 단순하고 원활한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권장

-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디자인)** 장애를 겪거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myGov’가 여전히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서비스 설계와 디지털 격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호주 기업의 참여 제고를 위한 조달 개선)** 지난 2년간 ‘myGov’ 서비스 개선 작업의 대부분을 글로벌 기술·컨설팅 기업이 차지해 왔으며, 향후 호주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이 입찰·조달 절차를 개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 **(사용자에게 데이터 통제 권한 부여)** 개인정보를 정부에 넘기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에 따라 데이터 수집을 최대한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가운데, 정부 기관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야 한다고 언급